

OPINION

2025년 4월 28일 월요일

김상훈의 세상읽기

흑묘백묘론과 시대정신



논설실장

#1.
‘흑묘백묘론’은 1979년 중국 공산당 군사위원회 주석 이었던 덩샤오핑이 실용주의적 개혁개방정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남긴 유명한 어록이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상관없이, 쥐를 잘 잡을 수 있으면 좋은 고양이’라는 의미다. 즉 공산주의나 자본주의나에 관계없이 인간들이 당면한 문제인 생활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면 그것이 제 일이라는 뜻이다.
여기에는 당시 중국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1970년 대 말 중국은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무엇보다 문화대혁명이 가져다 준 후유증이 너무 커 국민들은 혁명이나 공산주의 같은 사상학습에 피폐해져 있었고 특히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들었다. 일본과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은 물론 심지어 북한에게까지 뒤처져 있었다.
‘이대로는 안된다’는 위기위상이 전 국민들 사이에 퍼져 나갈 때 덩샤오핑이 ‘흑묘백묘론’을 주장하며 중국의 정치이념인 사회주의는 고수하되 나라에 빠진 경제에는 개방경제를 도입한 것이다.
이는 중국의 발전을 가속화시킨 도화선이 됐고 오늘날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게 만드는 단초가 됐다. 다시

말해 ‘흑묘백묘론’은 당시 중국의 상황을 관통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대정신이었던 것이다.
#2.
시대정신은 독일어인 차이트가이스트(Zeitgeist)에서 유래한 용어로 독일의 관념론 철학자 헤겔이 처음 사용한 개념이다. 인류 역사에서 어떤 시대이던 간에, 그 시대를 관통하는 하나의 절대적인 정신이 있다고 보고 이를 시대정신이라고 불렀다.
요즘에는 한 국가 또는 사회 구성원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시대의 문제점을 자각하고 이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말한다. 가벼운 의미로 어떠한 시대의 유행을 일컫는 말로 사용하기도 한다.
특히 ‘시대정신’은 우리나라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큰 위력을 발휘했다. 이를 제대로 알고 반영한 후보들이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통상 승리한 데 따른 것이다.
1987년 대통령 직선제 부활 이후 총 7번의 대선이 치러졌는데 1992년 대선에서는 군사독재를 청산하고 문민정부를 세우라는 시대정신을 담은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가 당선됐다. 1997년 대선에서는 IMF로 고초를 겪은 국민들의 변화 요구에 제대로 부응한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가 ‘준비된 대통령’과 ‘경제를 살립니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헌정 사상 최초로 정권교체를 이뤄냈다.
2002년 대선에서는 지역주의 극복과 행정수도를 제시한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승리했다.
2007년에는 ‘실천하는 경제 대통령’으로 국민의 마음을 흔든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가, 2012년에는 경제 민주화와 복지국가 이수를 선포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승리했다.

탄핵정국으로 치러진 2017년은 적폐청산과 공정사회 실현을 내세운 더불어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2022년에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검찰총장 출신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됐다.
#3.
이처럼 역대 대선에서는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의 자질 중 시대정신을 갖춘 후보를 선택했다. 한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을 대변하는 정신인 ‘시대정신’을 파악하는 역량이 대통령이 갖춰야할 필수 덕목이 된 것이다.
오는 6월 3일 또 다시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30여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앞두고 각 당 대선후보 선출을 위한 치열한 경선을 치루고 있다.
이번 대선의 핵심화두는 경제다. 현재 대세론을 형성 중인 이재명 민주당 경선 후보 역시 전방위적인 경제 성장 공약에 집중하고 있다. 그는 ‘성장’과 ‘통합’을 자기 정부 핵심 비전으로 제시하고, 이를 실현할 전문가 중심 싱크탱크도 발표했다. 또 자신의 민생 철학을 먹고 사는 문제를 가장 우선시한다는 의미로 ‘먹사니즘’으로 정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잘사니즘’으로 확장시키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 7공화국 선진대국’을 내건 홍준표 후보를 비롯해 국민의힘 후보들도 나름의 시대정신을 내걸고 경선전에 뛰어들고 있다.
상대 진영을 심판하는 진영의 논리만 극대화되고 있는 요즘, 시대의 정신을 읽어내고 미래의 비전을 세우고 실현하는 진정한 의의의 정치가 아니다.
분열된 우리 사회를 통합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을 가능하게 할 새로운 시대정신이 절실하다.

기고

농업과 기후 위기, 기술로 해답을 찾다



박용철

전남도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

기후변화는 전 세계적으로 농업 생산성과 작물 재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상기후, 가뭄, 폭염, 강우 패턴 변화, 병해충 발생 증가 등의 요인은 농업인의 경영 안정성을 위협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기술 보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피해를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연구와 개발뿐만 아니라, 농업 현장에 적합한 기술을 효과적으로 보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후변화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기온 상승으로 인해 작물의 생육 시기가 변하고, 과도한 고온이나 저온으로 인한 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기존의 작물 재배가 어려워지고 새로운 작물로 전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 병해충 발생이 증가하면서 농업인의 방제 부담이 커지고 있다.
온난화로 인해 병해충의 서식 범위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농약 사용 증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가뭄과 폭우 등 극한 기상 현상의 빈도가 증가하면서 작물의 수확량 변동성이 커지고, 이로 인해

농가의 소득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다. 넷째, 강우 패턴 변화로 인한 토양 유실이 증가하고, 수자원 관리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다양한 기술적 접근과 전략이 필요하며, 이를 농업 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품종 개발과 보급이 필수적이다. 가뭄, 폭염, 침수 등에 강한 내재해성 품종을 개발하고, 온도 변화에 따른 생육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저온·고온 적응 품종을 육성해야 한다. 또한, 병해충 저항성 품종을 연구·보급하여 농약 사용을 줄이고 환경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
스마트농업 기술의 확대 보급도 중요한 해결책이다. 드론과 센서를 활용한 정밀농업 기술을 통해 작물 생육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최적의 재배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토양 수분 상태를 분석해 자동으로 물을 공급하는 스마트 관개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농업용수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빅데이터와 AI를 활용해 병해충 발생과 작물 생육을 예측하는 기후 예측 모델을 개발·보급하는 것도 기후변화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농업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노력이

필수이다. 유기농업, 무경운 농업, 녹비 작물 활용 등 친환경 농법을 적극적으로 보급하고, 전기·수소 농기계를 확대 보급하며, 탄소 격리를 위한 바이오차(Biochar) 활용을 늘리는 등의 저탄소 농업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농업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기후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관련 보증을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업인이 기후변화 대응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 컨설팅을 강화하는 것도 필수적이다.
특히, 이러한 기술 보급은 현장 중심의 실용적인 접근이 중요하다. 지역별 기후 특성에 맞는 기술을 실증하고 확산하는 한편, 모바일 앱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 기술 정보를 제공하고, 빅데이터 및 AI 기반의 농업 컨설팅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정부 및 지자체와 협력하여 기후변화 대응 농업 정책과 기술 보급을 연계하고, 친환경 농업 지원 확대 및 보조금 정책을 강화하는 등의 정책적 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노력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농업 생산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물론, 환경 부담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아가 우리 농업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탄탄한 기반이 될 것이다.

사설

전남형 만원주택, 청년 유출 막는 역할 기대

‘전남형 만원주택’이 진도에서 첫 삽을 떴다. 지난 24일 진도군 진도읍 사업부지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 김태균 전남도의회 의장, 김희수 진도군수, 그리고 지역 청년·신혼부부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공식을 연 것이다. ‘전남형 만원주택’은 신혼부부(전용면적 85㎡이하)와 청년(전용면적 60㎡이하)에게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는 넓은 면적의 신축 아파트를 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전남도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혁신적 주거 지원 사업인 것이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청년 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을 조성해 만원주택의 원활한 운영 기반을 마련했다. 또 ‘전남도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입주 상담부터 준공 후 운영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도 제공키로 했다고 한다.
이날 첫발을 내디딘 진도 전남형 만원주택은 3442㎡부지에 내년 상반기 입주를 목표로 15층 2개 동 규모로 건설된다. 총 60세대(청년 30세대·신혼부부 30세대)에 공급될 예정이며, 총사업비 180억원 중 전남도가 50세대 공급분 150억원을 진도군이 10세대 공급분 30억원을 각각 부담하고 있다.
전남도는 진도군과 함께 지난해 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고흥군은 오는 6월, 보성·신안군은 10월 등 각각 50호씩 순차적으로 착공해 내년 말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전남도는 최근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만원주택 2차 사업 대상지로 곡성, 장흥, 강진, 영암, 4개 군(207호)을 새롭게 선정했다. 이들 4개 군에는 각 50호씩 200호를 도에서 일괄 공급하며, 군비를 투입하는 곡성군은 3호, 장흥군은 4호를 추가하는 등 총 207호의 만원주택이 2026년 착공과 2028년 준공 등을 거쳐 공급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오는 2035년까지 16개 군에 총 1000호의 만원주택 공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성공적으로 추진돼 과도한 주거비 부담 문제 등으로 전남을 떠나는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조성해 출산율을 높여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

온라인 쇼핑물 ‘곡성물’, 인기 이유 있네

곡성물은 곡성군 내 120여 농가와 업체가 참여해 쌀, 한우, 토란 가공식품 등 560여종의 고품질 농축특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곡성군의 지원으로 운영하는 공식 온라인 플랫폼이다.
지역 농산물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23년 9월 오픈했다.
이 쇼핑물이 지난해 10월 매출 10억원을 달성한데 이어 지난 14일에는 매출 15억원을 돌파했다. 쇼핑물 개설 20개월 만이다.
이는 신선하고 품질이 좋은 제품을 중간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곡성물의 다양한 마케팅 활동과 이벤트도 여기에 큰 역할을 했다. 실제로 이 쇼핑물은 지난 1월 설연휴 기획전, 정월대보름 맞이 이벤트, 삼겹살데이 기획전, 곡성물 입점업체 자체할인 기획전 등 매월 특별한 주제로 기획전을 선보이고 있다. 곡성장미축제 특별전, 곡성 멜론 기획전 등 시기에 따른 맞춤형 프로모션도 함께 열고 있다.
매주 수요일마다 8품목씩 30% 할인 행사를 진행하는 ‘수요 특가’ 행사와 ‘전 상품 무료배송’ 이벤트도 꾸준히 진행하고 있다.
곡성군의 적극적인 오프라인 홍보도 한 몫을 했다.
지난해 4월 광주 동명동에 팝업스토어를 운영하고 6월에는 일산 컨벤스에 개최된 ‘2024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 참여해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곡성물 알리기에 적극 나선 것이다.
이같은 노력 덕분에 곡성 대표 농산물인 유기농 쌀 백세미와 한우, 흑돼지는 물론 김부각, 사과, 멜론, 민물장어 등도 쇼핑물 인기 상품으로 자리 잡았다.
무엇보다 매출이 증대한 입점 업체들은 자발적으로 지역 아동을 위한 착한기부에 적극 동참하고 있고 곡성물도 이에 대한 답례로 기부 업체 기획전을 개최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품질 좋은 제품을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 판매자의 매출증대와 착한 기부까지 이끄는 곡성물이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는 모범사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취재수첩

혁신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이승홍

지역사회부 부장대우

혁신도시는 지방소멸과 수도권 과밀을 막을 돌파구를 만들어 내는 지역균형발전을 꾀하는 미래형 도시다.
정부는 지난 2005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 지방 이전 계획을 확정·발표했다. 당시 전체 410개 공공기관 중 수도권 소재 기관은 무려 346개에 달했다.
이 가운데 2019년 12월 1단계로 전국 12개 광역 시·도에 153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마무리했다. 광주·

전남(빛가람혁신도시)에는 한국전력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17개 기관이 이전했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지난 2018년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준비한다고 선언하면서다.
하지만 정권이 마무리될 때까지 진행되는 것은 없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지방시대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시작되는가 했지만 그 뿐이었다. 선거와 양역, 경쟁 등을 핑계로 답보 상태에 머물렀고, 결국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희망교란’이 돼버렸다.
공공기관은 수도권과의 불균형 해소에 목적을 둔다. 이는 해외 사례에서도 잘 나타난다. 프랑스는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수십년에 걸쳐 지방 이전을 추진했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가 극심했던 일본은 1988년

다극분산형 국토형성촉진법을 제정해 국가기관과 공공법인을 지방으로 옮겼다. 영국도 대규모 공공기관 이전 정책인 리용 계획을 강도 높게 추진했고 스웨덴도 16개 도시에 공공기관을 분산시켜 수도권 과밀을 해소했다.
수도권 집중도가 훨씬 극심한 우리나라는 보다 강력한 지방분산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현실적인 대안이다.
특히 공공기관 이전은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혁신도시가 지역경제 성장의 거점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방은 물론 수도권의 미래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다.
이제 6·3 대통령 선거가 5주 앞으로 다가왔다. 대선 후보들은 과거 공약의 이행 여부와 한계를 철저히 분석하고, 공공기관 2차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구호만 외치는 ‘국가균형발전’은 안된다. 차기 정부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빠르게 실행 시켜야 한다.

광남일보

www.GwangNam.co.kr

회장·발행인·편집인 전용준	논설실장 김상훈	편집국장 최현수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4 우편번호 61234 대표전화 (062) 370-7000 팩스 (062) 385-5400	정치부 370-7010 경제부 370-7020 사회교육부 370-7030 지역사회부 370-7040 문화체육부 370-7234 편집부 370-7082 사전부 370-7050	논설실 370-7060 뉴미디어본부 370-7222 임원실 370-7000 총무국 370-7093 사입국 370-7090 광고국 370-7070 독자관리국 370-7080 서울지사 02-978-7090
1995년 12월 12일 창간 2012년 5월 3일 등록번호 광주 가-52(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		